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The Perspectiv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송영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하여 적응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서의 국가 역할이 구체화되었으며, 기본계획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대책 간의 연관성 평가에 기반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공편익(co-benefit) 추구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 안전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의거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형태로 수립·이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으로 2011년부터 이행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차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시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책 이행에서 시행 과제의 적합성 및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질적인 저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이행 중인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성과와 효율적인 수행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요

가. 수립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공간 분포도 다양해지고 있어 해마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 p. 30). 독일의 손해보험사인 Munich Re(2015)에 따르면 1980~2014년 발생한 전 세계 자연재해의 연평균 피해액은 330억 달러 정도이나, 2003~2014년의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580억 달러로 전체 기간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며, 2014년의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액은 110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2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원인은 크게 기상학적·기후학적·수문학적·지질학적 원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기후

변화 관련 원인은 기상, 기후, 수문 등으로 전체 재해의 88%를 차지한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성공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더라도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2010, p. 9).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6대 도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강릉)의 연평균 기온이 1.8℃ 상승하여 이 기간 전 지구 평균인 0.75℃를 상회하는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폭염, 풍수해, 열대성 질환, 농작물 재배 적지 복상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박창석 외, 2014, pp. 52, 70-7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AR5)에서는 향후에 기후변화의 속도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20~30년 동안)에 적응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IPCC, 2014, 2015, p. 9). 또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후변화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의 추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이정호 외, 2015, p. 38).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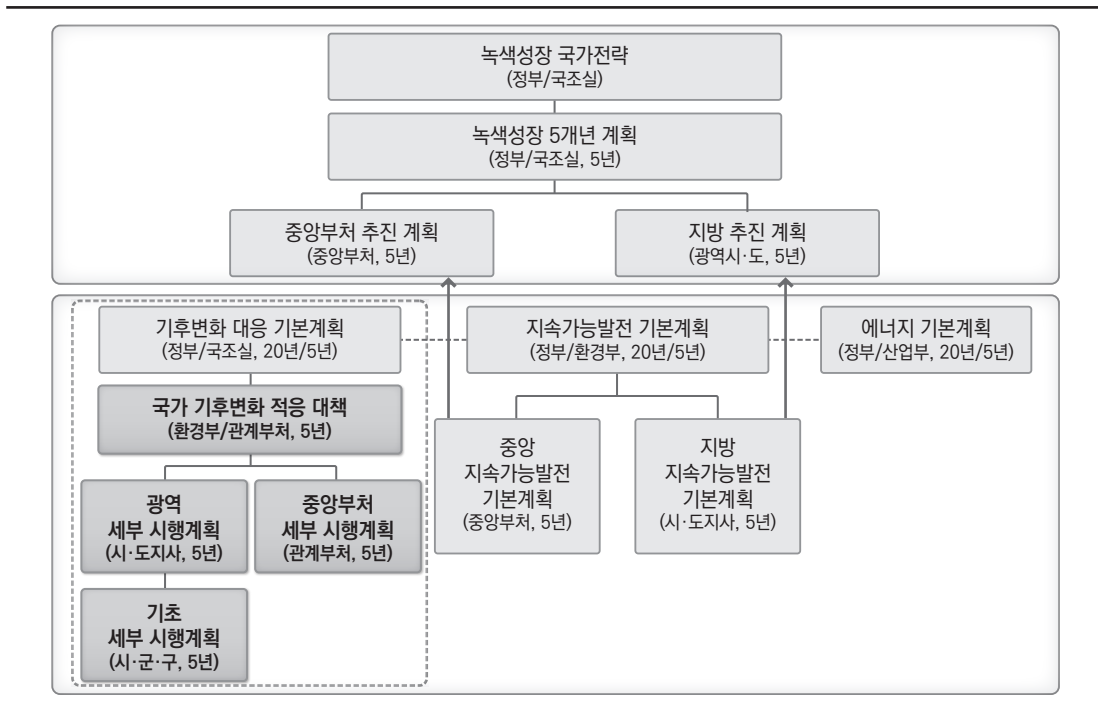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으로 2010년에는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1~2015)」이 수립되었고, 이후 2015년에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6~2020)」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지

자체에서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근거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나. 정책의 체계 및 주요 내용¹⁾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이 있다. 이들 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 계획 현황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내부 자료.

1) 박창석, 송영일, 이정호, 명수정, 조광호, 채여라,...., 이승한.(2014, pp. 9~16)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50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의 전략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의 정책 방향 및 이의 실천을 위한 과제와 핵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국가전략의 효율적·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중기 전략인 5년 단위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의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에서는 3대 정책 목표, 5개 정책 방향, 20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가 5개 정책 방향의 하나인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의 중점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중점 과제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는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 확충’, ‘부문별 적응 역량 제고’,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계 구축’ 등이 세부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증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 감시·취약성 평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국제 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이 기본계획은 신기후 체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증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하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다. 이 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특성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수립 이전인 2008년 12월에 13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2010

표 1.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현황

구분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2008. 12.)	1차 대책(2011~15) (2010. 10.)	1차 대책 수정·보완 (2012. 12.)	2차 대책(2016~20) (2015. 12.)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 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6개 부문별 적응 프로그램 - 생태계, 물 관리, 건강, 적응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야, 10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 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 산업/에너지, 교육·홍보, 국제 협력 - 87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생태계, 물 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 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 67개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부문이 4개 정책 부문, 17개 정책 기반 부문으로 구분되어 구성 - 과학적 위험 관리, 안전한 사회 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국내외 이행 기반 마련 - 341개 세부 과제
참여 부처	13개 중앙부처			20개 중앙부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적응 계획 - 국가 적응 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 행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적응 부문 국가 단위 최초 법정 계획 - 정부 및 지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P²⁾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계획 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대책 성과 계승 및 신규 정책 수요 반영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기반의 적응 우선순위 및 핵심전략 설정
계획 기간	2009~2030년	2011~2015년	2013~2015년	2016~2020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pp. 4- 5, 59.

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적응 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1-2015)’이 수립, 시행되었다. 이 대책에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 관리, 생태계의 7개 부문별 대책과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의 3개 기반 대책 등 총 10개 부문의 대책과 87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2차 대책은 1차 대책의 성과 및 리스크 평가 결과

를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4개의 정책 부문과 1개의 정책 기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다. 정책 시행상의 의의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다.

2)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의미하며,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온실가스 농도값을 토대로 한 대표적인 복사 강제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이다. 사회·경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결정 시 활용한다.

표 2.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부문별 세부 시행 과제

구분	전체 과제		중점 과제	
	과제 수	(%)	과제 수	(%)
건강	28	8.2	9	9.0
국토/연안	17	5.0	7	7.0
기후변화 감시·예측	32	9.4	8	8.0
농수산	30	8.8	5	5.0
물 관리	22	6.5	14	14.0
산림/생태계	88	25.8	36	36.0
산업	28	8.2	2	2.0
인프라/국제 협력	78	22.9	9	9.0
재난/재해	18	5.3	10	10.0
총계	341	100.0	100	100.0

자료: 저자 작성.

첫째, 이 대책 시행에 따라 부문별, 지역별 기후 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적응 대책이 수립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박창석 외, 2014, p. 17). 둘째, 기본계획(Master Plan) 차원의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책적으로 ‘적응’이 강조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국, 독일 등과 유사한 시기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현황

가. 대책 추진 현황

현재 시행 중인 국가 단위의 적응 대책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6-2020)’이다. 이 계획은 5개 정책 부문과 9개 부문(건강, 국토/연안, 기후변화 감시·예측, 농수산, 물 관리, 산림/생태계, 산업, 인프라/국제 협력, 재난/재해)에 대하여 총 341개의 시행 과제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표 2). 341개의 시행 과제 중 적응 대책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100개의 과제를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전체 과제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8조, 제2~4항에 근거하여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표 3.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1차 및 2차 연도 이행 실적

구분		1차 연도(2016)	2차 연도(2017)	증감
평가 대상 과제 수(개) (비율, %)	전체 과제 (총 341개)	285* (83.6%)	313* (91.8%)	28 (8.2%p)
	중점 관리 과제 (총 100개)	93* (93.0%)	99* (99.0%)	6 (6%p)
전체 과제 수(개)* (비율, %)	정상 추진	274 (96.1%)	276 (88.2%)	2 (△8.0%p)
	지연	7 (2.5%)	17 (5.4%)	10 (3.0%p)
	미추진	4 (1.4%)	20 (6.4%)	16 (5.0%p)
중점 관리 과제 수(개)* (비율, %)	우수	83 (89.2%)	92 (93.0%)	9 (3.7%p)
	보통	7 (7.5%)	1 (1.0%)	△6 (△6.5%p)
	미흡	3 (3.2%)	4 (4.0%)	1 (0.8%p)
	미추진	-	2 (2.0%)	2 (2.0%p)

* 총 341개 시행 과제 중 당해 연도에 시행된 과제의 개수.

자료: 송영일, 하혜민, 김시현, 장훈, 최희선, 김태현, ... 배채영. (2018).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p. 39.

이행 평가는 전체 과제와 중점 관리 과제에 대하여 진행된다. 평가 주기는 매년 진행하는 연차 평가, 대책 기간 중간에 실시하는 중간 종합평가,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2019년 현재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6-2020)’에 대한 이행 평가는 두 차례의 연차평가와 중간 종합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3)(송영일 외, 2018, pp. 27-39).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1차 및 2차 연도 이행 평가 대상 과제 수는 2차 연도가 313개로 1차 연도 285개에 비해 28개 증가하였다. 중점 관리 과제 수 또한 2차 연도에 99개로

1차 연도 93개에 비해 6개 증가하였다. 2016~17년 이행된 시행 과제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정상 추진’ 과제 감소, 지연 및 미추진 과제 증가를 나타냄으로써 이행 실적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7년 지연 및 미추진 과제의 발생은 주로 외생적 요인(법령 개정의 지연, 예산 미반영, 남북 관계의 경색 등) 때문이었다. 중점 관리 과제에 대한 이행 평가 결과 보통 및 미흡 과제는 예산 집행 미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016~17년 이행 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수산 및 물 관리 부문 시행 과제는 1, 2차 연도 이행률이 100%를 유지하였으며, 인프라/국제

표 4. 2016~17년 부문별 세부 시행 과제 이행 실적

(단위: 개)

구분	2016년 평가 대상				2017년 평가 대상			
	소계	정상 추진	지연	미추진	소계	정상 추진	지연	미추진
건강	25	25 (100%)	0	0	27	23 (85.2%)	3 (11.1%)	1 (3.7%)
국토/연안	14	14 (100%)	0	0	17	15 (88.2%)	0	2 (11.8%)
기후변화 감시·예측	26	26 (100%)	0	0	30	29 (96.7%)	1 (3.3%)	0
농수산	30	30 (100%)	0	0	30	30 (100.0%)	0	0
물 관리	21	21 (100%)	0	0	19	19 (100.0%)	0	0
산림/생태계	86	81 (94.2%)	2 (2.3%)	3 (3.5%)	85	77 (90.6%)	4 (4.7%)	4 (4.7%)
산업	24	21 (87.5%)	3 (12.5%)	0	24	20 (83.3%)	4 (16.7%)	0
인프라 /국제 협력	42	40 (95.2%)	1 (2.4%)	1 (2.4%)	64	47 (73.4%)	4 (6.3%)	13 (20.3%)
재난/재해	17	16 (94.1%)	1 (5.9%)	0	17	16 (94.1%)	1 (5.9%)	0
계	285	274	7	4	313	276	17	20

자료: 송영일, 하혜민, 김시현, 장훈, 최희선, 김태현 ... 배채영. (2018).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p. 41.

협력 부문은 전년도 대비 이행 실적이 감소하였다. 건강, 국토/연안 부문에서도 이행 실적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산림/생태계 부문은 과제 수가 많음에도 전년과 유사한 이행 실적을 보였다(표 4).

나. 대책 시행상의 주요 이슈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3년 차인 2018년에는 이 대책에 대한 중간 종합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평가는 현재 이행

중인 세부 시행 과제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의 적절성 점검과 향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방향의 보완 등이 목적이었다. 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전문 평가단이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 2차 대책 수립 시 제시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87개)와 시행 과제의 연계성 및 선정의 적절성
- 과제 시행으로 인한 당해 리스크의 저감 가능성

평가 결과, 대부분의 시행 과제가 기후변화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과제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모호성, 유사 과제 중복성, 시급성이 낮은 과제 선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부문별 리스크와 시행 과제의 연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문별 과제 선정의 적절성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시행 과제 이행으로 인한 부문별 리스크 저감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51점으로 나타나 부문별 시행 과제 선정의 적절성 평가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송영일 외, 2018, pp. 79-85).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당시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이 관련 부처에 제시되었으나, 시행 과제 선정 시 해당 리스크 저감을 위해 강한 연계성을 띠는 과제인지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다수의 시행 과제는 실질적인 기후변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조사 성격의 과제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과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적응 대책 개선 과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시행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적응’에 대한 인식 확산, 체계적인 적응 정책 이행 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한 대책(시행 과제) 수립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기후 동인과 부문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수행
- 리스크와 대책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기반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조사, 정보 관리 중심의 과제 선정에서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제 선정으로 전환
- 공편익(co-benefit) 추구를 위한 과제 발굴
- 부처별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이행 토대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 안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가 사회 전반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 이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표 과제의 발굴, 부문별·지역별 모범 사례에 대한 부처별·지자체 간 공유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성과를 명확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환경부, 2018, pp. 159-164).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현황을 토대로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한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평가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대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제2차 대

책에 대한 수정·보완 및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과 이를 통한 '적응'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응 대책 수립 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원칙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를 기회로 삼는 행동 및 과정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적응 계획 수립 시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구현되며, 계획 이행 시 많은 비용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배려, 우선순위에 따른 부문별 대책 실행 계획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서는 재난/재해, 폭염, 매개체 질병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민감 생물종 관리 및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등 자연·생활 부문 대응력 제고와 관련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경제 분야, 자원 분야, 사회 분야의 다양한 계획과 연계되므로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위계의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 및 수용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응 계획은 계획 수립과 이행 단계에서

의 모니터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한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래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후 안전 사회 구축 및 국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4). 이상기후 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 박창석, 송영일, 이정호, 명수정, 조광호, 채여라, ... 이승한. (2014).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방안 연구. 세종: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송영일, 하혜민, 김시현, 장훈, 최희선, 김태현, ... 배채영. (2018).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세종: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정호, 신지영, 정선희, 이승한, 최지혜, 강주연, ... 이승훈. (2015).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 운영 및 지원. 세종: 환경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10). 국가 기후변화적응 기본계획 수
립연구. 세종: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환경부. (2018).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전문가 포
럼. 세종: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IPCC. (2015). 기후변화2014 Part A-1 (기상청,
역). 서울: 기상청. (원서출판 2014)

Munich Re. (2015). Topics GEO: Natural
catastrophes 2014 Analyses,
assessments, positions. [Adobe Digital
Editions Version].[http://www.munichre.
com/site/corporate/get/documents_
E1018449711/mr/assetpool.
shared/Documents/5_Touch/
Publications/302-08606_en.pdf](http://www.munichre.com/site/corporate/get/documents_E1018449711/mr/assetpool_shared/Documents/5_Touch/Publications/302-08606_en.pdf)에서 인
출.